

세무관련 부패의 제도적 요인

Systemic Sources of Tax-Related Corruption

현 진 권 (Hyun, Jin Kwon) *

I. 서 론

조세는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근간을 이루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조세는 모든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형태의 세부담을 지고 있다. 세금에는 종류가 많아 어떠한 형태로든 세부담을 회피할 수 없다. 소득수준에 따라 세부담의 크기가 결정되는 소득세에서부터, 물건을 살 때마다 일정비율의 세부담을 지게 하는 부가가치세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기본적으로 각 개인은 세부담을 적게 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조세정책은 국민들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

조세관련 부조리란 조세를 집행하는 공무원과 납세자간의 타협의 결과이다. 즉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세부담을 적게 하려는 본능이 있으므로, 주어진 제도 하에서 세부담을 극소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때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뇌물을 통하여 자신의 세부담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세무비리를 통하여 개인의 불법소득을 얻는 대신, 발각되었을 경우 징계된다. 그러므로 세무공무원은 부조리가 발각될 주관적인 확률과 뇌물 액수를 비교하여 뇌물의 수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세무관련 비리는 개인의 도덕심의 결여보다는 제도의 미비로 인한 요인이 크다. 개인의 도덕심 결여에서 오는 비리는 어느 시대와 나라에서도 있어 왔던 것이므로 정책 차원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많은 세무관련 비리는 제도가 불합리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여지가 많은 경우에 빈번하게 생겨 날 수 있다. 또한 세제에 대해 공무원과 납세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으로 인해 공무원이 정보에서 우위에 있으므로 납세자는 공무원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政策·博)

담 결정을 공무원에 의존하게 되므로, 뇌물을 통한 협상의 여지가 많이 생겨나게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만연하고 있는 세무관련 부패의 원인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즉 정책을 통하여 세무관련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절에서는 세무관련 부패를 보는 근본 시각에 대해 논의하고, 제Ⅲ절에서는 세무관련 부패의 원인을 살펴본다. 제Ⅳ절에서는 세무관련 부패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제Ⅴ절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마무리짓는다.

Ⅱ. 부패 논의를 위한 기본방향

세무관련 부패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 부패에 대한 기본 시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부패에 대한 접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가능하므로 논의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¹⁾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부패는 제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패에 한정하므로, 이에 대한 시각을 우선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 부패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

부패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의 제도 및 행정이 비합리적인 경우와 합리적인 제도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행정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패는 행정의 뒷받침이 가능한 제도의 개혁과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행정의 집행을 통하여 근절할 수 있다.

우리의 관습 및 문화가 본질적으로 부패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시각은 문제의 핵심을 혼란스럽게 한다. 인간의 본질이 불완전하고 이기적이므로 철저한 사회의식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행정과 제도의 지속적인 합리화가 의식수준을 높이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 부패수준이 낮은 이유는 선진국 사람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기보다는 선진국의 제도 및 행정이 우리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패는 “제도의 잘못으로 인한 부패”와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개인에 의한 부패”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개인에 의한 부패는 어느 시대와 국가에서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를 통하여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1) 세무부조리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로는 부정방지대책위원회(1993)를 들 수 있으며, 이 보고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박재완(1997)은 부패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고찰을 보여준다.

부패의 대부분은 제도의 잘못이나 제도가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도덕한 개인에 의한 부패는 제도개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즉 제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어느 수준의 부패는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서도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부패는 사회 전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할 수 있다.

2. 부패근절의 기본방향

세무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직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과 “공무원과 납세자간의 관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전자의 방안은 단기적 및 정치적인 효과는 크지만 행정비용이 높고, 장기 및 실질적인 효과는 낮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후자의 방안은 장기적이며 효과가 크며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방안은 공무원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거나 처벌수준을 높이는 두 가지 방안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감시기능을 높이는 방안은 행정 비용이 크며, 감시를 다시 감시하여야 하는 악순환이 존재한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는 방안은 부패의 시장가격만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만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간접적인 방안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무원과 납세자간에 있을 수 있는 부패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다.

Ⅲ. 세무관련 부패의 제도적 요인

1. 복잡한 조세체계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으며, 국세는 중앙정부의 재원이 되는 반면,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국 세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 방 세	취득세, 등록세, 마권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세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현행 세목 수를 살펴보면 국세가 16개, 지방세가 15개로 총 31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세목이 모두 중요한 재원수단으로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 부당이득세 등과 같이 조세로서 전혀 기능을 못하는 세목이 있고, 인지세, 마권세, 면허세 등과 같이 세수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조세라기 보다는 수수료의 성격이 짙은 세목이 있다. 세목 수는 이처럼 많으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0개 정도의 세목이 전체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²⁾

우리나라 각 세목의 내용을 보더라도 세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세법개정을 하며, 이로 인해 세제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조세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만큼, 세법개정은 오랜 기간 동안 활발한 토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세법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이 1981년과 1986년이며, 이후 10여년 간 대규모 세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매년 세법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절차를 살펴보더라도 충분한 토의를 통한 합의보다는 정치적인 현안에 맞추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이 관례적인 현실이다. 그러므로 기본 골격은 유지한 채 부분적인 내용만을 개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각 이해집단들의 이기적인 제안들이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세제는 어렵고 복잡하게 되었고 조세제도가 정부와 국민사이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들은 세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었다.³⁾

그러나 조세가 어렵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세무공무원들은 일반국민과 달리 조세제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세가 복잡하고 어려워질수록 세무공무원과 국민들 사이의 세제에 대한 이해의 격차가 심화되어 세정을 집행하는데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그 만큼 많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자의적 법 해석과 집행으로 세무담의 정도도 자의적으로 결정된다면, 일반국민이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지켜나갈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만일 조세제도가 간편하고 쉬워 세무공무원뿐 아니라 일반국민 누구나가 쉽게 해당사안에 대한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적절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국민들은 당당하게 그 세금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과 국민들간에는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는 간편하고 명확하며 그 내용이 쉽게 국민에게 이해되어

2) 우리나라 세제가 복잡하다는 의견은 대부분의 재정학자들 사이에서 공감되고 있다. 세제의 복잡성을 지적한 연구로 윤건영(1996), 최광(1996) 등을 들 수 있다.

3) 세제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가 지불하게 되는 비용으로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을 들 수 있다. 박태원(1994)에 의하면 소득세 원천징수로 인한 순응비용은 총원천징수액의 0.1~8.7% 수준이며, 법인세는 0.43~7.7%, 부가가치세는 0.05~0.9%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야 한다.

2. 비합리적인 조세제도 및 행정

조세제도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금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관행을 살펴보면, 조세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입안되었고, 이에 따라 조세행정과 국민들의 경제환경이 매우 불건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조세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법에 의한 납세보다는 비리를 포함한 관행에 의한 납세를 야기하게 된다.

우리나라 조세제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는 세목으로 부가가치세를 들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전체 세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담수준이 곧 소득세와도 연관을 가지므로 경제활동에 커다란 영향이 미치는 세목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일반세율 10%가 적용되는 일반과세자와 영세 사업자를 위해 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특례자로 이분화되어 있다. 과세특례자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영세업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1995년 기준으로 전체 총납세인원 중에서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납세자가 전체의 약 50%로 그 적용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높은 비율은 부가가치세의 적용이 이원화되어 있고, 일반과세에 비해 과세특례의 세율이 터무니없이 낮아 많은 사업자들이 과세특례자로 안주하려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과세특례의 기준이 되는 연간 4,800만원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므로, 과세특례 사업자는 사업실적에 대해 과소보고하여야 하므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보다는 불건전한 관행에 의해 조세행정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세특례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서는 두차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연결고리가 사업자로 하여금 과세특례자로 남아 있게 하는 유인책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의 세부담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같은 소득규모를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에 세부담이 같아야 하나, 실제로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사업소득자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현진권(1996b)에 의하면 최고 소득계층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에 비해 세부담이 4배 정도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 2〉 과세특례자의 추이

(단위: 천명,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총납세인원 (A)	1,834	1,989	2,102	2,253	2,388	2,526
과세특례인원 (B)	1,202	1,267	1,322	1,357	1,321	1,273
B / A	65.5	63.7	62.9	60.2	55.3	50.4

3. 조세관련 정보공개의 불충분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에 정보에 있어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조세관련 정보를 가능하면 적게 공개하여 조세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낮게 하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조세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조세부담이 높아질수록 조세관련 정보는 다양하고 풍부하게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세관련 정보의 양이 점차로 줄어드는 현상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국세통계연보를 통하여 현진권(1996a)에서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국세통계연보』의 페이지 수와 국세부담율을 이용한 다음의 회귀분석식을 사용한다.

$$(\text{정보량}) = \beta_0 + \beta_1 (\text{국세부담률}) \quad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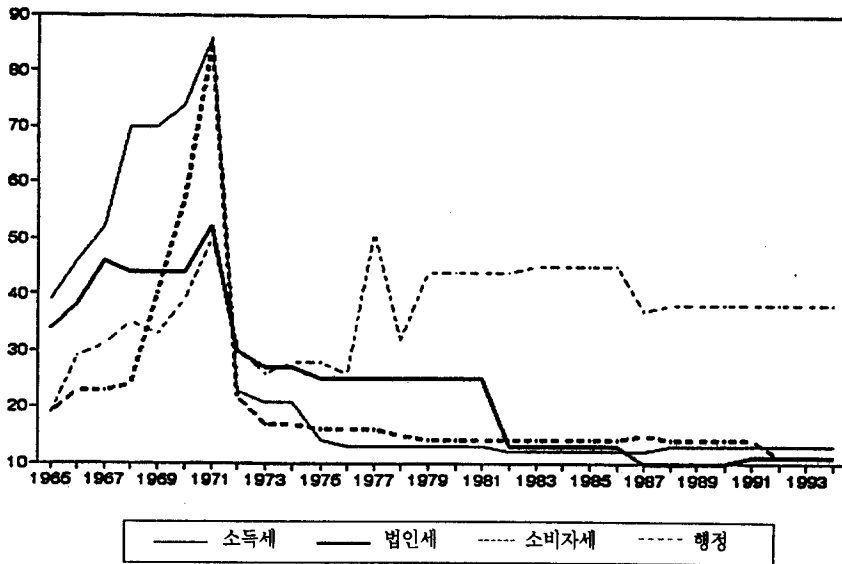
여기서 β_1 은 국세부담율과 국세관련 자료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음(-)의 값을 가지면 국민들의 국세부담율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음을 의미한다. 『국세통계연보』의 전체 페이지 수와 세목별로 나눈 각 세목의 페이지 수를 사용하여 식 (1)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국세통계연보』의 전체 페이지 수와 국세부담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β_1 의 추정치가 -2.72를 보여주나 통계적 유의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경우는 추정치가 각각 -5.29, -3.6, 2.58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정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는 국세부담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정보의 양이 줄어드는 정도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소비세의 경우는 국세부담율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의 양도 많아지는 결과를 보여 줌을 알 수 있다. 국세의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국세관련 자료에 대한 양은 늘어나 납세자들에게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나,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자료의 양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주었다.

IV. 개선방향

1. 조세체계의 단순화

조세제도는 정부와 국민간의 약속이다. 국민들이 각자의 세 부담 정도가 어느정도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도는 간단하고 명료하여야 한다. 제도가 복잡하면 국민들이 이를 익히기 위해



〈도 1〉 『국세통계연보』의 세목별 페이지 수 변화(1965~1994)

〈표 3〉 국세부담율과 국세 정보량간의 관계

<p>1. 국세통계연보 :</p> <p>(정보량) = $168.11 - 2.72$ (국세부담율), $R = 0.02$</p> <p>($t = -0.76$)</p>
<p>2. 소득세 :</p> <p>(정보량) = $98.56 - 5.29$ (국세부담율), $R = 0.25$</p> <p>($t = -3.06$)</p>
<p>3. 법인세 :</p> <p>(정보량) = $73.53 - 3.60$ (국세부담율), $R = 0.35$</p> <p>($t = -3.85$)</p>
<p>4. 소비자세 :</p> <p>(정보량) = $91.53 - 2.58$ (국세부담율), $R = 0.49$</p> <p>($t = -5.20$)</p>

시간을 낭비하게 되며, 제도가 불투명하면 국민들은 불투명한 관행에 얽매어 경제행위를 하게 된다.

독립된 세목으로서 세수 기여도가 낮고, 기능이 없는 세목은 모두 통폐합 혹은 폐지하여 조세체계를 대폭 단순화 해야 한다. 현재 국세 세목은 16개에서 8개로 지방세는 15개에서 9개로 전체 세목은 31개에서 17개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표 4〉 조세체계의 단순화 방향

현행세목	개정안
1) 국세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폐지 폐지 폐지 부가가치세 통합 수수료로 전환 폐지하고 일반 세원으로 전환 , ,
2)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마권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취득 등록세로 일원화 , 수수료 수수료 폐지 종합소득세로 합산 폐지

2. 조세체계 및 세정의 투명화

조세제도가 투명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제도가 철폐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에서 과세특례제도를 없애고 일반과세로 일원화하여, 제도를 균등하게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세특례를 폐지할 경우 많은 영세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목적이 투명한 상거래와 조세행정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불투명하였던 경제적 거래가 모두 제도권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10%의 부가가치세율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세율을 낮추는 것도 비제도권에 있던 상거래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표가 커짐에 따라 세수규모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세율을 낮춤으로써 제도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세수규모도 증가하는 이중적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과세특례제도의 폐지를 통해 모든 상거래가 제도권에서 포착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 규모도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의 세부담의 수평적 불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조세관련 정보의 완전공개

정부와 납세자간의 이상적인 관계는 정보를 공유하여 대칭적인 정보체계하에서 정부가 납세자에게 조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홍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공개 여부가 정부의 선택 사항일 때는 정보를 공개하여 납세자를 설득하는 방법과 정보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서 납세자로 하여금 무관심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우 이상적인 방안이나 단기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두 번째 방안은 정보 자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비대칭적인 정보하에서 납세자의 비판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효과가 매우 유효하며 지속적이므로 이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 이루어진 일종의 공공재 성격을 가지므로 국가안전 등과 같은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정보의 공개를 통해 정부와 국민들간의 대칭적인 정보관계에서 정책방향을 디자인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유는 정부가 선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이며 이러한 환경하에서 정책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조세관련 정보는 모두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납세자들이 조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정부의 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가시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표면화될 경우 해당 공직자가 문책을 당하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공직자의 입장에서 정보는 정보 자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공직자 개인의 신분상 위험을 회피하고자 한다. 조세관련 자료가 양과 질에서 뒤떨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공직사회의 분위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와 같은 구조하

에서는 정보를 축소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가장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현 구조하에서 자료공개 수준에 대한 논의는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세관련 자료는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공공정보인 만큼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법적으로 구체화되어 보호되어야 하며, 행정부서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V. 요약 및 결론

세무관련 비리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비리는 개인의 부도덕적인 측면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조리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제도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는 세부담을 극소화하려고 하고, 세무공무원은 징계의 위험을 최소로 하면서 뇌물액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우리의 제도가 세무관련 비리를 없앨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제도는 오히려 세무관련 비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에 비리가 없는 이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제가 단순해야 한다. 복잡한 세제는 납세자를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보다 정보에서 우위에 있게 되므로 쉽게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 둘째, 불합리한 세제는 납세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조세를 불신하는 풍토를 만들게 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셋째, 조세관련 정보는 납세자에게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납세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납세자의 조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고 비리의 유혹을 줄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곽태원, 『우리나라 조세제도 운영비 추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4-08, 한국조세연구원, 1994.
- 박재완, 「부패와 반부패 정책의 경제적 함의」, 『공공경제』, 제2집, 한국공공경제학회, 1997.
-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세무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1993.
- 윤건영, 「한국의 조세정책: 과제와 선택」, 『정부와 경제』, 한승수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최광(편), 1996.
- 최광, 「한국의 세제 및 세정개혁의 기본인식과 정책방향」, 『정부와 경제』, 한승수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최광(편), 1996.
- 현진권, 『조세관련 자료체계의 변천과 개선방향』, 정책보고서 96-09, 한국조세연구원, 1996a.
- 현진권(편),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연구논문집 96-01, 한국조세연구원, 1996b.